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 규제 개요 >

1. 규제사무명	구속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강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이진영															
	담당부서 (과)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학수		연락처	02-2100-2953															
	과장	김진 흥		이메일	ljy0825@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9항, [별표8]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국내은행</td><td>'16년말 기준, 16개 은행</td><td>규정 변경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없음</td><td>-</td><td></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내은행	'16년말 기준, 16개 은행	규정 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없음	-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내은행	'16년말 기준, 16개 은행	규정 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없음	-		-																
5.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div><input type="checkbox"/> 강화규제내용</div> <div><div>○ 구속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div><div><div>*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실제 적용결과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적정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8]을 개정</div></div></div>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div><input type="checkbox"/> 은행법(제69조), 동법 시행령(제31조) 및 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제9항)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구속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div>																			

□ 규제 강화 내용

① 과태료 예정금액이 은행의 총수취금액/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삭제

-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 =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은행의 총수취금액/12]
- (개선) 과태료 부과금액 = 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 꺾기 위반정도 판단기준인 '구속비율' 산정방식 개선

- (현행) 구속비율 = [은행의 총수취금액/12] / 여신금액
- (개선) 구속비율 = [은행의 월평균 수취금액] / 여신금액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 제9항 관련)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 제9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속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하되,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취한 다음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구속비율(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금액을 여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한다.
1)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1) -----

제5호, 제6호 또는 제88조 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인에게 은행상품을 판매한 시점부터 은행이 수취한 총금액

2) · 3) (생략)

다. (생략)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대상상품 결과 동기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은행취급상품	
	고의	과실	고의	과실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 이상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5% 이상 10%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2% 이상 5%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2% 미만	기준금액의 2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 제88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월수입금액

2) · 3)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예정금액은 은행이 판매한 대상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대상상품 구속비율 동기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은행취급상품	
	고의	과실	고의	과실
여신금액의 10% 이상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여신금액의 5% 이상 10%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여신금액의 2% 이상 5%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여신금액의 2% 미만	기준금액의 2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과 그 밖의 은행취급상품을 모두 판매한 경우 각 구분에 따라 산정된 예정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부과대상건의 과태료 예정금액으로 한다.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 예정금액을 감면하

1) (생략)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차주인 여신거래와 관련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

2

0% 이내-----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 **현행 부과기준으로는 여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액이 산정되어, 금전제재의 실효성이 미흡**
- 부과기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화하여 구속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도모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 **꺾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서민·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 보호를 강화**
- 은행 부담능력 및 기존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과태료가 산출될 수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

2.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는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는 구속행위 억제에 적합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존 부과기준으로는 십만원 이하의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가 산정되기도 하므로, 은행으로 하여금 구속행위를 억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개정안은 은행권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여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비규제·덜 규제적인 대안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

3.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개정기준에 따라 **최소 125만원 ~최대 2,5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산출되므로, 여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과 비교시 **합리적** 수준임

* 금융업법별로 300~3,500만원(은행법은 3,259만원) 수준으로 법인 과태료 부과

<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부당편익제공, 꺾기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는 각 금융업법마다 중하게 규율하는 규제인 한편, 은행법의 구속행위(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낮음
-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이 각각 5,000만원 및 3,500만원으로 은행의 2,500만원보다 높음
 - 또한 기준금액의 50~100% 이내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

< 위임근거 검토 >

- 은행법 제69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3항, 은행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9항 및 [별표8]에 따라,
 - 구속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의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이해관계자 협의 >

대 상	협의 일자	협의 내용
입법예고	'17.2.17~'17.3.19. 예정	

< 규제 개요 >

1. 규제사무명	불건전영업행위 유형 명확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이진영															
	담당부서 (과)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학수		연락처	02-2100-2953															
	과장	김진 흥		이메일	ljjy0825@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2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국내은행</td><td>'16년말 기준, 16개 은행</td><td>규정 변경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없음</td><td>-</td><td></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내은행	'16년말 기준, 16개 은행	규정 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없음	-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내은행	'16년말 기준, 16개 은행	규정 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없음	-		-																
5.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div><input type="checkbox"/> 불건전영업행위 유형 명확화</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은행법 제34조의2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舊은행업감독 규정 제91조의2로 금지되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등이 신설 법규에 포섭되는지 불명확해짐에 따라 이러한 부당 행위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됨을 명확히 함</div>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div><input type="checkbox"/> 은행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제2항에서 불건전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div>																			

□ 규제 강화 내용

-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통해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

* 허위사실 기재, 질권 설정 등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은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임에도,

개정전 법규*로 포섭되어 오던 동 부당행위가 현행 은행법규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재근거 불명확

*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u>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u><신설></u>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u>감사통할책임자</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u>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은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임에도,

- 현행 은행법규상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재근거가 불명확

* 현재는 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재하고 있으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있는 감독규정으로 제재근거를 상향조정할 필요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① 대표사례 : 은행이 예금주 요청에 따라 예금 잔액이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허위 발급하거나, 예금의 질권 설정사실을 누락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예금주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경우

② 관련 제재기준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 별표3)

유형별	제재양정
예·대출금 잔액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과다·과소기재 포함)	문책경고(감봉)이상
담보설정 등의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누락	문책경고(감봉) 이하
조회서를 회계감사인에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지 않는 등 사무 부당취급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③ 제재사례

- A은행 : '11년 직원 3명에 대한 제재조치(정직·견책·주의)
- B은행 : '12년 직원 3명에 대한 제재조치(감봉)
- C은행 : '13년 직원 6명에 대한 제재조치(감봉 2명, 견책 4명)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행위는 예금주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부당행위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 현행 법규로는 불건전영업행위의 포섭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 거래처의 자금력을 위장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억제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제고 가능

2.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신분제재 대상이 되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등의 명시는 불건전영업행위 억제에 적합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법규로는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유형이 불건전영업행위로 포섭되는지 불명확하므로 기존 법규 만으로 목적 달성 곤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개정안은 기존의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및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의해 규율되던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 하는 것으로 가장 비규제·덜 규제적인 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

3.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개정안은 기존의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및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의해 규율되던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 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것으로 판단

<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당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 은행법 제34조의2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제5호에 따라, 불건전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이해관계자 협의 >

대 상	협의 일자	협의 내용
입법예고	'17.2.17~'17.3.19. 예정	